

이재명, 정면돌파 의지... 다음주 '100일 메시지' 주목

다음달 5일 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 검찰 전방위 수사 입장 표명 "쇼 말고 수사를 하라" 최측근 잇단 구속에 검찰 비판 수위 높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는 다음달 5일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 압박에 당내 파열음까지 불거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를 계기로 날려 거세지는 검찰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강경 모드로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권은 이 대표의 입장 발표가 사법리스크를 바라보는 국민과 당원의 공감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지난 8월말 당권을 잡은 이 대표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자신을 옥죄어 오는 검찰 수사에 대해 일정한 '로우키'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측근 인사들의 줄 구속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대표의 입장 표명 빈도와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핵심 측근인 김용 전 민주당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당 대표 정부조정실장이 지난 19일 구속됐을 때는 이례적으로 SNS에 직접 글을 올려 검찰이 '조작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자신은 물론 가족 등 주변 인사들에 대한 계좌추적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자 지난 25일 최고위 회의에서는 "언제든지 털어보라",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하라", "선무당이 동네 굿하듯 한다" 등 검찰을 비난하는 작심 발언을 내놨다.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폭로를 지렛대 삼아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지 수사망을 좁혀오는 데 대한 강한 반감을 여실히 표출한 것이다.

이 대표가 이처럼 대응 수위를 점차 끌어올리는 데에는 당내 결속을 다지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다. 아직은 소수지만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유감 표명 요구에 더해 거취론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에 역공을 취하는 전략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취임 100일을 맞는 내달 5일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종합적이고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 수세 국면을 극복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화되는 다음 달 중에 검찰이 이 대표의 소환 통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달 5일이 취임 100일인 만큼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특별 메시지를 내게 될 것"이라며 "국민과 당원들을 상대로 사법 리스크 논란에 대한 유감 표명이 담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 기소의 다음 단계로 지난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을 고려할 때 '사법 리스크'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고민거리다. 당장은 주류를 중심으로 단합이 유지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내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균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다고 해도 검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네이처리퍼블릭 점주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을지기는민생실천위원회 상생 꽃 달기 행사에서 꽃을 달고 있다. /연합뉴스

찰의 수사를 무력화 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 대표의 취임 100일 메시지가 '야당 탄압' 등 자기 방어적 측면만 강조된다면 오히려 당내 분란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에 대한 입장 발표는 늦은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하지 않

는 것 보다는 낫다"며 "문제는 메시지 내용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윤석열표 vs 이재명표 대립... '예산 국회' 막판 진통

여야, 현·전임 정권 관련 예산 삭감 맞불... 법정 기한내 처리 못할 듯

올해 '예산 국회'에서 막판 진통이 우려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각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각각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의 방어·삭감에 나서면서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회 예결특위에 따르면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오는 28일 정부위·국토교통위·운영위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한다.

예결특위는 애초 지난 17일부터 감액·증액 심사를 각각 사흘씩 진행한 다음 이달 30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감액 심사에만 꼬박 일주일의 소모했다.

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이견으로 충돌·파행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기획재정부 위·운영위 등은 아직 상임위 단계에서의 예산안 의결조차 마치지 못했다.

이에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은 물론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같은 달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나 국정 과제와 관련된 예산에 대대적인 '칼질'을 벌이고 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 예산을 애초 정부안 303억8000만원에서 165억원 가량 깎인 138억7000만원으로 단독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도 1조1393억원 삭감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9409억원은 그대로 처리됐다. 같은 날 정부위에서도 역시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부조정실 규제 혁신추진단의 운영비 예산이 정부가 요청한 56억 3000만원에서 인건비 10억2000만원 등 총 18억 6900만원 감액된 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는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도 여야 충돌이 계속됐다.

지난 25일에는 대통령비서실이 편성한 업무지원비 158억원과 관련, 민주당이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 대통령실 인원이 대폭 줄었음에도 관련 예산

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감액을 주장, 마찰이 빚어졌다. 앞서 23일에는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지난 6월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 민주당 측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된 기관이 아니라 점을 지적하며 관련 예산 70억원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역시 현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원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지난 22일 원전을 비롯한 전력 산업 수출을 지원하는 명목의 전력해외진출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전임 정권과 관련된 사업 예산의 삭감을 추진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지난 23일 예결특위 예산소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년 퇴임식 및 신임 원장 취임식 비용으로 책정된 1억8000만원을 두고 여당 위원들이 '호화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해 여야가 충돌했다. 같은 날 기재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정사 신축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이 10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정부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광주시의회, 오늘부터 내년 본 예산안 심사

광주시 7조 2535억원·교육청 3조 575억원

광주시의회는 28일부터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내년 본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441억원(3.5%) 늘어난 7조2535억원이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조8976억원, 특별회계 1조3559억원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보다 4655억원(18.0%) 증가한 3조575억원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8~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내년 본 예산안 심의는 9개 광주시의회 출범이

후 첫 심사인 만큼 예산안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특히 전체 의석 23석 가운데 22석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같은 당인 강기정 시장의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또한,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2268억원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경우 이자만 최소 연 1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채를 갚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무장 광주시의회 의장은 "광주의 재정 상황은 마른 수건도 다시 짜야 할 정도로 녹록지 않다"며 "시민 혈세가 목적과 취지에 맞게 편성됐는지, 지금 광주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등을 냉철하게 따져가며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